의회SNS

서초구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2일간 결산·추경·구정질문 등 민생 현안 총력 점검
기정예산 대비 3.5%(약 351억원) 증액한 추경안 가결

의회(의장 유지웅)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22일간 이어진 이번 회기에서 기정예산 대비 3.5%(약 351억원) 증가한 총 1조 40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회기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결산의 적정성과 추경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결산 예결위(위원장 김안숙)는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결산 심사인 만큼 구민의 눈높이에서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폈으며, 추경 예결위(위원장 이은경)는 어르신 지원부터 AI 인프라까지 민생 사업을 고루 점검해 가용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따졌다.


결산 예결위 위원장 **김안숙**


추경 예결위 위원장 **이은경**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형우 의원 발의)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등이다.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실시





신정태(사진 왼쪽), 김안숙 의원

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태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김안숙 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각각 구정질문에 나섰다.

#신정태 의원은 청년·여성·어르신의 생활과 직결된 3대 민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해 서초청년네트워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 ▲취약계층을 넘어 일반 어르신 가구까지 확대한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 실질적 낙상 예방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안숙 의원은 관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통 미흡 문제를 짚고,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관리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방배동 두레마을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 독점 실태를 조명하며 구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관리 대책 마련도 함께 당부했다.

5분자유발언

정순용 의원 **서초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리풀 장미버스' 도입 제안**

이은경 의원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김안숙 의원 **결산을 통한 서초구 재정 효율성 강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조희옥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중 출산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 복지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정민우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실직·질병·고립 등으로 증가하는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제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년층 대상포진 진료 인원 증가에 따라 접종 지원을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구민으로 확대해, 질병 부담을 낮추고 어르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하라' 결의안 채택



의회는 김해바른·안종숙·조희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사업지가 서초구 우면동 주거·교육시설과 80m 거리여서 소음·진동, 전자파, 화재 등 주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LH의 건립 철회, 국토부의 용도 제외, 한전의 전력 공급 보류를 요구하고, 과천시의 협조와 서초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